李 “자사고 대폭 늘려야” 鄭 “사교육 지옥 만드나”

■ 대선 후보 6명 2차 TV토론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대선후보 6인은 11일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17대 대통령선거 두 번째 TV 합동토론에서 교육·복지·여성 정책을 놓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이회창 “대학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
권영길 “부자들 세금 제대로 걷겠다”
문국현 “中企 평생학습 기회 늘릴것”
이인제 “특성화고 350개까지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밤 개최한 제2차 대선주자 TV합동토론회에서 6명의 후보는 교육·복지·여성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왼쪽부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후보. /연합뉴스

◇모두 발언부터 신경전=정동영 후보는 “정직과 신뢰,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 조건”이라면서 은연중에 ‘이명박 후보=부도덕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애썼다.

이회창 후보는 “위장취업, 위장전입, 탈세 경력을 가진 후보가 어떻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명박 후보를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는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험없고 무능하며, 무책임하고 말만 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실정을 꼬집는 것으로 방어막을 쳤다.

◇교육공약 열띤 공방=참여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과 공교육 정상화 해법,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 확대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세 후보 모두 대학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명박), “반대한다”(정동영), “하향평준화를 위한 폐단”(이회창) 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고교평준화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수능등급제를 처음 시행했는데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학교육 자율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이 후보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자율형 사립고 공약 폐기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3불제를 폐지하겠다고 화끈하게 선언하더니 본고사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말과 뒤에 말이 다른 전형적인 ‘왔다갔다’의 모습”이라면서 “수능등급제는 일종의 연좌제인데 인정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명박 후보는 “모든 후보가 제 정책을 자세히 안 본 것 같다”면서 “이회창 후보가 수능등급제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나는 분명히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 문제도 학교가 많아지면 들어가는 것도 쉬워지고 과외도 필요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동영 후보가 자신의 발언시간을 활용, “자사고 100개를 만들면 사교육 지옥에 들어간다. 운하재앙 보다 자사고 재앙이 크다”며 거듭 비판하고 나서자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가 세계적 대학을 15개나 만든다고 하는데 착각이다. 대학은 스스로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이 돼야 한다”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李 위장전입’·부패 공방=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과 자녀 위장취업 의혹 등을 겨냥,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원칙을 바꾸는 지도자가 있으면 법 질서와 사회기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동영 후보는 “나라가 바로 서려면 지도자가 깨끗해야한다”면서 “특히 이명박 후보가 아들 딸도 위장취업 시켰는데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이 탈세한 뒤 몇 년 뒤에 내면 무사하겠느냐”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대기업은 평생학습 기회가 100% 주어지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93%에 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그 기회가 2~3%도 안된다”며 “교육의 사각지대인 평생학습을 통해 명품 중소기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평준화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거짓이다. 대학을 평준화해 입시제도를 없애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자들에게 세금 제대로 걷어서 이중 24조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11조6천억원을 국·공립 대학 통폐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방과후 수업을 강화하고 영어인증제도 도입, 영어마을 설립을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특성화고를 35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BBK 수사검사 탄핵’ 충돌

신당 “탄핵안 표결 강행”… 한나라 국회의장석 한때 점거

임시국회 파행…오늘 의장 직권 본회의 개의

BBK 사건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에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신당은 11일 한나라당이 계속 본회의 소집에 불응할 경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군소정당들과 함께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과 ‘이명박 특검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추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용 정략적 행태”라며 신당의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이로 인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파행사태가 빚어졌다.

양당은 12일 중 임채정 국회의장 중재로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탄핵안을 둘러싼 입장이 맞서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임 의장은 12일 오후 2시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 양당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면서도 ‘김경준 기획입국’을 떠드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열어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률 원내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과 마지막까지 절차상 협의를 하겠지만 끝까지 방해하면 국회법상 경호권 발동 요청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경준씨를 접견한 율사 출신의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피고인과 에리카 김의 입을 막으려고 도에 어긋나는 불법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 심재철·배일도·진수희·이방호 의원 등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의장석을 점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점거에 앞서 의원들에게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결국 검찰을 흠집내고 대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에 불과하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야 탄핵요건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탄핵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과반 득표 확보”… 한나라 배부른 고민

수도권 50%·영남 75%·호남 20% 득표율 목표

한나라당이 ‘배부른 고민’에 빠졌다. 이명박 대선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전국 55%, 지역별로는 영남 75%, 수도권과 충청은 50%, 호남은 20%의 득표율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득표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영남과 충청의 경우 이회창 후보가 나오면서 표가 분산되고 있고, 호남은 전통적으로 약세지역인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역별 할당 목표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 후보나 당 지도부는 실제로 지난 8월 한나라당 경선 직후부터 이명박-박근혜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 지역의 대선 득표 상황으로 공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바 있다. 기업인 출신 이 후보의 실적 중심 사고가 나타나는 대목이지만 이 후보의 추진력과 카리스마를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다.

특히 이 후보는 비정치권 지지인사들이 누구보다도 많아 자신이 책임진 지역구에서 낮은 득표율이 나올 경우에는 곧바로 공천 탈락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더욱이 이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시사한 만큼 실적을 명분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킬 경우 항변하기도 힘든 것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박근혜계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돼 이 후보 마음대로 공천권을 휘두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그동안 이 후보의 인생역정을 비추어 볼 때 득표 목표치를 통한 대대적 물갈이는 피해가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